

총선 판도 가를 정계개편론 향방은

‘빅텐트’ vs ‘제3지대’

보수대통합 · 호남 기반 3지대론 부상...갈 길 험난
보수통합, ‘탄핵갈등’ · 제3지대, ‘외연확장’ 관건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총선레이스 본격 개막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도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선 보수대통합을 위시한 ‘빅텐트’ 론과 거대양당과 차별화된 ‘제3지대’ 론을 중심으로 이합집산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빅텐트론은 전통적 정치구도인 ‘거대 양당제’에 기반한 진보-보수 양자대결을 염두에 두고 세력을 큰틀로 한 데 묶자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 여당 심판’을 위한 보수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제3지대론은 기존 양당제, 이념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 차별화된 가치와 대안을 내건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지난 17일 창당발기인대회를 마치고 본격 창당준비에 들어간 대안신당(창당) 등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계개편 논의 또는 경쟁은 내달 초중순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매듭지은 후 본격화될 각 당의 공천 · 쇄신 작업과 맞물려 정계개편 논의 또한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이슈와 움직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빅텐트론과 제3지대론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보수대통합론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정국 최대이슈로 부상했지만,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 비상행동 · 우리공화당 등 ‘통합 파트너’들과의 논의가 진척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내 노선 갈등의 핵심 쟁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이 보수통합론 부상을 계기로 오히려 재분출되고 있고, 한국당과 파트너들 사이 소통과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난제만 쌓이는 형국이다.

부산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한국당 해체’와 ‘지도부 · 중진 등 전원용퇴’를 요구하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진영 쇄신 · 통합 논의에 제차 불이 붙었지만, 황교안 대표 ·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용퇴론을 사실상 일축하고 김 의원의 주장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당내에서 벌어지는 등 오히려 어수선했던 가운데 모습이다.

게다가 통합 논의의 주축인 바른미래당 변혁은 간판인 유승민 의원까지 2선으로 물러난채 통합 논의에는 선을 긋고 신당 창당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변혁이 12월 중순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당 창당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합 논의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오며 도 변혁 등이 끝내 지지세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대안신당은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독자세력화가 아닌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제3지대 불씨 살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사실상 분당 수순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도부를 ‘친정계제’로 재정비하고 제3지대 실현에 적극 나설 심산이다.

대안신당이 탈당 전 민주평화당의 호남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바른미래당 지도부 또한 당내 호남계가 핵심 축인만큼 이들의 규합 가능성 자체는 낮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의 결집이 제3지대라는 기치에 부합할만큼 의미 있는 규모와 세를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술적으로 양측 의원들의 숫자를 더할 경우 원내교섭단체 기준인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절대 다수가 호남 인사들인데다 간판으로 내세울 ‘스타 플레이어’ 또한 마땅치 않아 확장력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연확장’, 특히 비호남계 · 중도 성향 인사 등 인재영입의 향방에 제3지대의 명운이 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과의 ‘인재 쟁탈전’도 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해 옛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금주 의원이 최근 민주당 복당에 성공하면서 호남 지역 인사들 사이 민주당 입당 시도가 연이어 있을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호남계 내부에서부터 이탈 · 균열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제3지대 구축 시도 자체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50% 준연동형 비례제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양당제를 균열내고 다당제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지만,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에서 대안 · 정책 정당을 표방한 세력들의 연대와 규합으로 무게추가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이다.

野, 김오수 법무차관 질타 “조국 檢개혁 혜택 1호...국민 우습나”

장제원 “개혁 진정성 없어...피해는 국민에게 가”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점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차관에게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 논란과 관련해 “30년 전 만들어진 사무규칙 구제화를 지금 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이 우습나”라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조국이란 사람이 어

려분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1호 혜택”이라며 “장관도 없는데, 차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가 보도돼 ‘검란’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정교한 메스로 독소조항만 들어내야 한다. 차관이 왜 이렇게 막 나가냐. 그리 보복하고 싶냐”고 “이런 식으로 정권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검찰을 난도질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검찰 조

직이 동요하는 이런 부분은 차관이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고, 특히 조국 사태를 겪는 이 시점에서 차관이 직접 대통령과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옥죄고 손발을 묶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지금 어떠한 개혁을 하더라도 훗날 이것은 조국 관련 개혁법이다”라는 이런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에 이어 여당에서도 검찰과 좀 더 소통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차관도 검찰 출신이지 않냐”며 “억울하고 답답하겠으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인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오수 차관은 “성찰하겠다.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과 소통하고 있지만 잘 설명하고 더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패스트트랙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박종문 현재 사무처장을 향해 “기간이 지나서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현재에서 원천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며 “현재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586 퇴진론에 “임종석 · 이인영 · 이상호 큰 역할 할 것”

“임종석, 민주당에서 삼고초려 해서라도 다시 불러낼 것”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가 촉발한 ‘586 퇴진론’에 대해 “임종석 전 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호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더 큰,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임 전 실장을 정치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그대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8그룹으로 대변되는 이상호 의원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586 퇴진론에 대해) 불쾌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

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임종석 전 실장을) 다시 정치권에 불러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일부 민주당 핵심 의원들에 의하면 임 전 실장은 자기 선거구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중구와 합쳐진 성동, 즉 중구 성동갑으로 가는 것(출마)이 좋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이 (총선 불출마에) 정치적 포석을 깔고 무엇을 던질 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후 종로로 이사한 임 전 실장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지역구

‘종로’ 출마에 승부수를 거는 듯했다. 그러나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경선 가능성이 거론되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나 16·17대 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성동 등 출마설이 돌았다. 그러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통일부장관 임각이나 서울시장 도전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 불출마 배경에 대해 “실제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나 백원우 전 의원처럼 대통령 측근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은 가능하다”며 “임 전 실장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치 플레이에 능한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